

광주 자치구 대형공사 부실 진행 드러나

광주시 감사위 대형공사 58곳 특정감사 지적사항 12건 적발, 26명 신분상 조치

공공화장실 내 여자용 좌변기를 남자용보다 적게 설치하는 등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대형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4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장 58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지적사항 12건을 적발했

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공사금액이 부풀려지거나 부적당한 금액 2100여 만원을 회수하고 460여 만원은 감액했다.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공무원과 건축사 등 2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훈계 12명, 주의 9명, 징계 5명)했다.

감사 결과 서구는 지난 2017년 7월

모 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화장실의 좌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규정보다 적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은 지난 2018년 5월 방음벽 설치공사 중 내부 검토 보고도 없이 착공 3일 만에 공사를 일시 정지시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모 건축사무소는 지난 2018년 4월 동구가 발주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두레마을 건립공사를 하면서 도면을 부

적정하게 설계해 공사비용 460만원을 추가 발생케 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2018년 2월 문화의집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살수기 사용료 과다 지급과 단열재 중복 계상 등 공사비 정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

남구청은 지난 2018년 11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도로를 굴착하고 점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은홍 기자

“사립대 감사 확대·국공립대 개혁” 촉구 학벌없는 사회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확대와 국공립대 회계·행정 시스템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교 이후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전국적으로 113개교에 이르고, 이 가운데 광주권 대학은 광산대(개교연도 1954년), 광주가톨릭대(1961년), 남부대(1999년), 서영대(1979년), 조선간호대(1972년) 등 모두 5개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의원이 감사전담조직 부재를 지적한 국공립 34개대 중 광주에서는 광주교대가 포함됐다.

학벌없는 사회는 “사학 자율성을 이유로 사립대 부정부패를 방지해 교육부의 이번 감사는 의미가 있으나 선도적으로 규모가 큰 대학들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넘어 모든 사립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비로소 사립대 실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대에서도 여전히 회계 부정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교육부는 책임자 처벌을 넘어 국공립대 회계 및 행정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전남대 G&R허브 건립(1293만 원), 대강당 리모델링 및 증축(1136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용도외로 예산을 사용한 점을 예로 들었다.

조인호 기자

한빛 4호기 ‘최대 크기 공극’ 발견...정비착수

한빛원전 4호기(가압경수로형·100MW급)에서 또 공극(구멍)이 발견돼 원전당국이 정비에 착수했다.

앞서 4호기에서는 지난 3월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사능 유출방지용 내부철판(CLP)과 콘크리트 벽체 사이에서 ‘깊이 90cm’ 크기의 공극이 발견돼 원전 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섰다.

24일 한빛원전본부에 따르면 4호기에 대한 추가 공극 조사를 받던 지난 23일 증기발생기에서 터빈발전기로 증기를 공급하는 주증기 배관 하부에서 가로 331cm×세로 38~97cm, 깊이 4.4~157cm 크기의 공극이 발견됐다.

이 공극은 그동안 발견된 공극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한빛 4호기에서는 102곳에서 공극이, 8곳에서 그리스 누유부가 발견돼 정비가 진행 중이다. 원전당국은 이번 공극발생 원인을 원전 건설 당시 콘크리트 다짐 불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공극에 대한 구조물 건전성 평가와 완벽한 정비를 통해 원전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점검 진행상황과 정비결과를 지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빛 4호기는 지난 5월18일부터 발전을 중단하고 정비에 착수했다. 제7차 계획예방정비는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되며, 정비가 완료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더위에 구름 모자 쓴 부산 영도 부산지역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24일 오후 부산 서구 천마산하늘전망대에 설치된 영화 ‘국제시장’의 엔딩 장면 조형물 맞은편의 영도구 봉선산 일대가 짙은 해무로 뒤덮여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낙숫배·해상펜션 안전 뒷전...위반 무더기 적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채 영업해 온 낙숫배와 해상펜션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감찰을 벌여 1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낙숫배와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해상펜션은 어촌 소득활동 공간인 유어장에 설치한 해상 숙박시설물로 4명 가량이 묵을 수 있는 크기의 방 1~2개와 화장실에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춘 구조다. 바다 위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영업형태로써 자칫 안전 소홀로 대형 사고가 날 위험이 크지만 신고 및 관리·감독을 지자체와 사업주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보편에 가입할 수 없어 사고가 나도 보상조차 받지 못한다. 이번 감찰은 바다를 끼고 있는 8개 시·도 24개 시·군·구에 위치한 일반낙숫배 147곳과 유

어장낙숫배 60곳 등 207곳을 표본으로 정해 실시했다.

감찰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185건이었다.

낙숫배의 경우 승선자 명부와 승선인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항 신고를 했다. 구멍조끼를 방지하거나 낙숫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구멍조끼 대신 사용하고 있었다.

낙숫배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낙숫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경우도 있었다. 낙숫배에 주류를 불법 반입해 마시다 발각되고도 했다.

해상펜션의 경우 낙숫배 설치가 금지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 있었다.

실지 금지 지역이나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를 내준 지자체도 함께 들쭉이 났다. 해상낙숫배영업을 설치해 어촌계에 위탁·운영하면서 해상펜션을 불법 증축하거나 파

손된 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도 수두룩했다.

낙숫배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구멍조끼도 입지않은 채 읍주 상태에서 낙숫배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해양교통안전공단 낙숫배 안전성 검사의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견돼 보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전체 위반사항 185건 중 146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146건 중에서는 20건은 형사고발, 11건은 영업정지, 25건은 지정취소, 44건은 과태료 부과다. 나머지 46건은 시정·통보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해경 등 공무원 3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취할 것을 명령했다. 경정계 1명, 경고 12명, 주의 26명이다.

뉴시스



이런판결 저런판결

‘기밀 유출’ 전직 군 간부들 2심도 실형...“국가 배신”

일부 무죄에도 형량 유지 “배신적 행위, 변명 여지 없어”

군 기밀정보를 빼돌려 해외 정보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일반 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팀장 황도(59)씨와 홍도(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체 운영자 이모(5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심리 결과를 종합해보면 황씨와 홍씨가 탐지·수집·누설한 정보가 160건 이상인데, 북한 물자, 환율정보 등 26건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비밀표지성 판단 아니라 가치성 등을 갖췄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일부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환율정보 등은 비밀표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군과 관련된 정보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누설시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홍씨는 구속상태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황씨 등이 누설한 기밀이 상당수에 이르고 기간 또한 장기간에 해당한다”며 “정보사령부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두 사람이 외국과 정보기관의 인적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자신이 몸담았거나 몸담았던 기관과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탈북 이후 북한 관련 활동을 해온 이씨의 경우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통일부 자문위원 위촉 등 북한 전문가로 활동해왔는데 홍씨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자료에는 홍씨가 황씨로부터 받은 군사기밀이 포함돼있긴 하다”면서도 “군사기밀 표지가 전혀 없고 홍씨로부터 출처가 정보사령부라고 들은 것도 없으며 오히려 홍씨가 자료출처를 허위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누설시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건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

영유아건강검진 중 장애아가 많음, 자폐치료 중인 민력군